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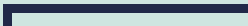


# FUTURE CONSENSUS INSTITUTE WORKING PAPER



## 미중경쟁 2050과 동아시아 질서의 미래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



## 미중경쟁 2050과 동아시아 질서의 미래

기획 및 편집 | 이대식 여시재 동북아협력실장, 김보경 여시재 솔루션디자이너  
문 의 | 070-4458-5057, [fujing@fcinst.org](mailto:fujing@fcinst.org)

발 행 | 2021년 8월 5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길 224

전 화 | 070-4227-9751

홈페이지 | [www.yeosijae.org](http://www.yeosijae.org)

여시재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2021 FUTURE CONSENSUS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 미중경쟁 2050과 동아시아 질서의 미래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

2021.8.5

여시재

Yeosijae (Future Consensus Institute)  
224 Baekseokdong Gil,  
Jongno Gu, Seoul, Korea



## 인사말

여시재는 미중갈등을 극복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끌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동북아협력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였습니다.

'동북아협력 전문가 워킹그룹'은 동북아협력 관련 기관의 전·현직 대표 및 핵심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달 진행되는 '동북아협력 전문가 워킹그룹 세미나'는 에너지, 교통 등 각 분야 핵심 전문가들이 모여 기초발제와 토론을 통해 동북아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솔루션을 모색하는 논의의 플랫폼입니다.

여시재는 지난 8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1차 동북아협력 전문가 워킹그룹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엄재호 여시재 시니어펠로우의 개회사로 시작된 본 세미나는 2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각 그룹의 주제와 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A그룹은 '미중경쟁 2050과 동아시아 질서의 미래'를 주제로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이 기초발제를 했고, 정상기 前 외교부 동북아협력대사,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재훈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 이사장, 김옥재 동북아 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 조용성 前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원수 여시재 국제자문위원단 위원장, 이대식 여시재 동북아협력실장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B그룹은 '동아시아 인프라 협력 현황과 과제 - 해저터널 구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안병민 한반도 경제협력위원장이 기초발제를 했고,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박진영 서울주택도시공사 해외사업단장, 김호기 한국전력 동북아연계부장,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원수 여시재 국제자문위원단 위원장, 이대식 여시재 동북아협력실장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동북아협력 전문가 워킹그룹 세미나의 결과물로 <동북아협력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본 시리즈의 두 번째 워킹페이퍼,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의 '미중경쟁 2050과 동아시아 질서의 미래'입니다.

## 미중경쟁 2050과 동아시아 질서의 미래

손열 | 동아시아연구원장



미중관계를 동아시아 흐름 속에서 얘기하고자 할 때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연 미래 동아시아 질서는 미중관계의 동학에 좌우될 것인가. 둘째, 미중 전략 경쟁은 대립과 충돌로 연결이 될 것인가. 셋째, 미중 양국은 상대국에 대해 결정적 우위를 확보할 수단(압박 카드)을 보유하고 있는가. 넷째, 미중 간 대화협은 가능한가. 다섯째, 타협이 가능할 경우, 타협 이후의 대안적 질서 마련이 가능한가. 기존의 근대문명 속에서의 국제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지 않으면 미중 간의 갈등과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안적 질서 모색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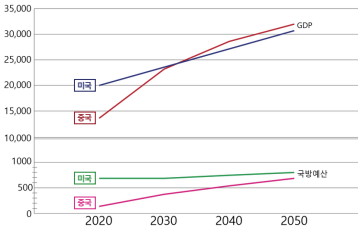
### 지역개념

한국에서 '동북아'를 '한반도와 그 주변 4강'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매우 지정학적인 접근이다. 한국의 생존을 위한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 동북아는 상당히 유의미한 지역적 공간이긴 하지만, 주변국과 새로운 지역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데는 다소 한정적인 공간이다. 외교면에서 일본과 중국은 '동아시아'라는 보다 넓은 지역개념을 쓰고 있고, 미국은 그보다 더 큰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공간 그리고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개념을 내걸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또는 세력을 포괄하는 지역을 얘기할 때 '동아시아'라는 더 넓은 공간으로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 동아시아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에서 얘기하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인도,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중요한 두 액터로서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8개국을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 동아시아 미래 시나리오

동아시아 미래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이다. 먼저 G1, 미국 패권이 지속될 것이라는 시나리오, 두 번째 G2, 미중이 경쟁도 하지만 패권을 공유하는 미중 공동 패권(bigemony)의 시나리오, 세 번째 G0, 패권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도 강대국의 하나로 행동하며 역내 강대국들이 각자도생하는 강대국 경쟁 구도이다. 네 번째 GX, 패권 없이 다자간 지역 협력을 통해 강대국 및 중견국들이 규범 기반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협력 구도이다.

&lt;표1&gt; GDP/군사비 격차와 경쟁 국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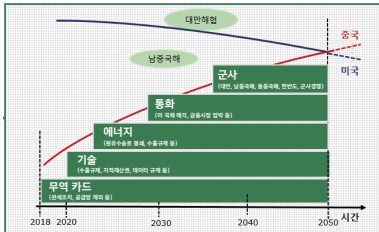


자료: 동아시아연구원

역사적 경로에서 중요한 기점은 미중의 GDP 역전이 일어나는 2030년과 미중의 군사비 지출 및 군사력이 균형점에 근접하는 2050년이다. ①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이 백중지세(伯仲之勢)에 이르는 2030년 전후로 양국은 기술 및 경제, 가치와 규범 영역에서 첨예한 경쟁과 대립을 벌일 것이며, ② 중국의 군사비 지출 규모가 미국에 근접하는 2050년에 가까울수록 양국은 군사 영역에서 대결과 충돌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중간 시점인 2040년은 군사적 경쟁으로의 전환기로서 (미중 군사비 3:2) 통화와 군사 양 영역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미중 간 '진검승부' 즉, 본격적인 안보 경쟁과 갈등은 2040년 이후 전개될 것이다. (하영선·손열, EAI 2021)

미국의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중국의 리더십이 확대되는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세력전이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먼저 기존 질서 혹은 패권국의 지위를 놓고 부상국과 패권국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미중의 경제력(GDP) 백중세가 이루어지는 2030년까지 미국 패권의 탈정당화(delegitimization)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된 이후 지배 불복의 탈집중화(deconcentration)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으로 확대될 것이다. 과거 냉전의 경우, 미국과 소련 간에 안보, 경제, 이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 경쟁과 대립, 분단이 이루어졌다면, 미중 전략 경쟁은 2050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무역, 기술 부문의 갈등으로 시작, 정치/규범 경쟁으로 확산되고, 에너지 부문의 갈등, 이후 통화, 군사 부문의 단계적으로 갈등의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lt;표2&gt; 미중 간 압박카드의 경합 양상



자료: 동아사이언스 EAI

두 번째는 패권국 혹은 부상국이 군사 및 다른 분야에서 연계를 통해 전체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경우 평화로운 세력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Competition Without Catastrophe”는 2019년 말에 커트 캠벨 백악관 NCS 인도 태평양 조정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NSC 수석 국가 안보 보좌관이 공저한 논문의 제목이다. 이 글은 미중관계가 파국으로 가지 않는 선에서 경쟁과 공존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과거 패권 경쟁 또는 세력 전이로 소위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전쟁과 무력 충돌을 수반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지난 5세기에 걸쳐서 16번 중 12번은 패권전쟁을 벌였고, 4번은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세력 전이가 일어났다. 75%의 확률로 전쟁이 발생했으나, 20세기의 2번의 세력 전이(영국에서 미국, 미소 갈등)는 군사충돌을 통하지 않고 평화로운 세력전이가 일어났다. 따라서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세력 전이가 평화롭게 일어날 수도 있고, 군사충돌 이전에 다른 분야에서 승패가 이미 결정이 돼서 무력충돌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가 될 수도 있다.

## 미중 2030 전망

중국은 시진핑 체제하에서 두 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제1원칙은 ‘신형 대국 관계’ 3원칙 즉, 불충돌·불대항, 상호 존중, 협력 공영으로 대미 관계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제2원칙으로 ‘신형 주변국 관계’를 ‘친(親)·성(誠)·혜(惠)·용(容)’이라는 4가지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다만, 중국은 자주, 안전, 발전으로 요약되는 핵심 이익을 강조하며, 미국이 핵심이익을 침해할 경우 유소작위 즉, 맞서 싸우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불충돌·불대항, 상호 존중, 협력 존중을 하되, 이를테면 중국의 주권 문제인 대만·홍콩·신장위구르 관련하여 미국이 개입할 때는 결연히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은 협력(Cooperation)-경쟁(Competition)-대결(Confrontation)이 동시에 작동하는 '3C'로, 경쟁과 갈등뿐만 아니라 협력의 분면을 열어놓는 복합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보건·북한 문제 등에서는 중국과 협력하되, 경제·기술 등의 영역에서는 중국과 경쟁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 남중국해 문제 혹은 인권문제에서는 중국과 대치를 이어갈 것이다. 민주당 정부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향후 8년 동안은 미중의 충돌과 협력이 공존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에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이 서로 협력하여 평화적인 역내 질서를 구축해나갈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중의 정체성 갈등

현재 미중 경쟁은 안보·경제 영역에서의 이익 갈등을 넘어 정체성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 경쟁은 가치규범을 바탕으로 지구적, 지역적 패권국으로서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체성 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침해 및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의 한계, 미국식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다. 한일-중일 관계와 마찬가지로 미중 경쟁도 양국 간 정체성 시비와 갈등이 부정적인 촉매제로 작동하여 기존의 안보 딜레마를 더 강화시키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상대국에 결정적 우위 확보 수단

전체적으로 미국이 기술, 에너지, 금융 통화, 군사안보 등 다방면에서 중국에 대해 가지는 압박 카드의 수는 월등하나, 장기적으로 중국의 반격 카드의 축적에 따라 양국이 치를 비용은 점점줄 것이다. 양국은 국가 안보 견지에서 분단과 탈동조화(decoupling)를 초래하는 압박 카드를 사용하기에는 매우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다. ICT, 반도체, 미국의 말라카 해협에서의 에너지 수송로 압박, 혹은 통화를 둘러싼 통화전쟁의 가능성을 검토해왔으나, 시간이 지날수록(특히 2030년 이후)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미국이 이러한 압박 카드를 사용하기는 부담이 클 것이다.

결국 미중의 사활적 경쟁은 '군사안보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양국은 2050년에 다다를수록 핵이나 첨단 무기 체제를 둘러싼 본격적인 군사/기술 경쟁, 경쟁적인 군사동맹 확보 경쟁, 군비 경쟁, 그리고 군사전략으로 서로를 압박하려고 하는 군사적 다툼 등을 전개할 것이다.

## 미중 간 군사 충돌의 가능성

역사적으로 두키디데스 합정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16케이스 중 13케이스)는 부상국이 아닌 기존 패권국의 선제적 군사 충돌이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역전이 가시화되는 경우 미국은 압도적 우위에 있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 군사적 충돌과 선제적 제압으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고자 하는 유혹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군사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부상이 확실할 때 과연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서 선제적 제압으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고 할 것인가. 둘째, 과거 미소 군사경쟁처럼 미중 간 본격적인 군사경쟁이 벌어진다면, 항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미중의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은 대표적으로 대만과 남중국해이다. 시진핑 주석의 미래 전략에서 대만 통일은 중요한 위치이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 대만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미국이 '현상 유지를 통한 점진적 통일'이라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저해한다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대만 독립 선언 등 대만의 영구 분단을 가정사실화하는 시도는 중국의 군사적 통일 유혹을 불러오고, 미국의 개입을 초래하여 전면적인 군사 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30년 대만 및 미국 지원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우위가 현격해지면 현상 유지를 위한 미국의 억제력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결국, 군사적으로 중국의 대만 무력 점령을 억제할 수 없다면 중국에 대한 정치·외교적 억제 체계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남중국해는 세계 해상물동량의 40%가 이동하는 지역으로서 현재 중국은 거의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해양영토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개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군사적 장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할 경우 중국의 승리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30년 동남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향상되고 미국의 군사안보적 연대가 약화되면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 지역은 특별한 미국의 군사 개입 없이 지역 분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상당히 우위를 점하는 형태의 지역 분쟁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2040년대를 넘으면서 미국과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 유사시를 넘어 직접적인 양자 군사력 경쟁에 나설 것이다. 특히, 중국은 군비 경쟁, 무기체계 경쟁, 동맹 확대(혹은 deconcentration) 경쟁 측면에서 미국을 맹렬히 추격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압박 카드가 더 많지만, 중국의 압박 카드가 쌓이면서 미중 간 아시아에서 극지전이 미 본토를 포함한 미중 간 핵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양국 간 핵무기 경쟁이 본격화되면 상호 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의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1970년대 초 미소 간 전략핵무기 감축 협정과 같이 양국은 공멸을 회피하기 위한 핵무기, 미사일 관련 타협과 조정을 진행할 확률이 커질 것이다. 실제 마소의 경우에도 양국 간 본격적 군축 이전에 군사적 신뢰 구축을 마련한 사례가 존재한다. 1975년에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이 합의되고,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발족했는데, 이는 마소 양자가 아닌 다자적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미중 간에 군사적 균형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호 확증파괴(MAD) 혹은 미니 상호확증 파괴(mini-MAD) 상황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양국 간 타협과 조정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의 헬싱키 협약, 헬싱키 프로세스 구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대타협의 길

미중의 대전력이 수정되지 않는 한 미중 전략 경쟁은 '상호 압박→비용 상승→위기 고조→타협'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경로는 전쟁은 회피할 수 있으나 2030년대에서 2050년대 사이의 긴 경쟁이 불가피하며, 미중 양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막대한 비용과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미중이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다시 말해 '20년의 위기'를 겪지 않고 헬싱키 프로세스로 갈 수 있는 타협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역내 평화·번영 프로세스 가동을 위해서는 헬싱키 프로세스와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다자적인 바스켓을 설정하고, 신(新)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중 양국과 역내 이해 상관자인 한국, 일본, 인도 등이 다자적 협의를 통해 군사, 기술, 금융 통화, 무역, 가치규범 등 다중 바스켓을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아태 신질서를 향한 다자협력체제를 추구해야 한다.

향후 한국이 대안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중, 대미 전략도 중요하지만 일본과 호주, ASEAN 각국, 인도와의 미들 파워(middle-power)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중견국과의 '인도-태평양 협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 없이 역내 네트워크 구축 및 인도-태평양 전략을 모색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일본도 한국을 건너뛰고(Korea passing) 인도-태평양 전략을 모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미중의 경쟁적 구조를 협력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단계로 한일 관계 개선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부록] 주제 발전을 위한 논의

### Comment 1

동아시아 미래 시나리오 4가지 중 개인적으로는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GX 구도를 지향하지만, 현재 미국은 G1 구도 유지를 원하고, 중국은 G2 구도를 희망하고 있다. 또 중국은 태평양 동서로 중국의 전통적인 영향력(Sphere of Influence)을 존중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그리고 역내 국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은 G0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예측한다.

미중 장기 시나리오 2030, 2040, 2050 프로젝션을 할 때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미국의 경제성장보다 최소 2배 이상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제조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과거에 소련은 생산성의 증가 없이 '생산요소 투입(input)'에만 의존하였고, 생산요소들이 고갈되자 한계에 봉착해 내리막길을 걸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생산요소 투입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으로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도달해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경제 지표가 서서히 슬로다운(Slow Down) 되는 조짐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경제 고도성장을 나라들이 겪었듯이 중국의 경제성장도 3% 이상 가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Answer 1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인구 변수를 중요시 한 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젝션 했기 때문에 <표1>에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도 결국 인구 보너스가 끝나 인구가 줄게 될 것이고, 미국은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되는 국가라는 측면에서 2060년대가 되면 재역전의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인구 변수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 중국의 GDP 성장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조금 완화해서 예측한 경향도 있다.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IMF 외환위기가 오기 전, 동아시아 국가들은 옛 소련의 투입 경제와 마찬가지로 자원의 투입(input)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고, 경제발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현재 AI와 IT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캐치업(catch-up)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과연 중국이 세계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존재한다.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적인 억압이 이루어지고, 정보화가 국가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는 사회에서 캐치업 단계를 넘어서 리딩(leading)의 위치로 나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Comment 2

지금 미중 간의 경쟁은 체제 경쟁뿐만 아니라 문명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포괄적인 갈등 구도로 가고 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좋은 해결 방법 중 하나는 과거로 돌아가서 문제가 어디에서 연유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서방에서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 결국 중국도 민주주의로 서방화될 것이라는 가설이 존재했다. 공산당의 권한이 많이 완화될 것이고 일종의 공산당의 컨트롤 기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시진핑 주석 집권 후 이러한 예측은 모두 빗나갔다.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의 독점, 당의 위위가 유지되고 있다.

소련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주의는 모두 붕괴했는데, 왜 아시아 사회주의는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가. 일부 전문가들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특성과 아시아의 공동체 사상은 뿌리가 같다고 본다. 중국은 소련의 붕괴를 통해 해답을 얻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는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동시에 이뤄내고자 했기 때문에 불만과 혼란을 불러왔고, 결국 공산당을 해산했다. 동소련 前주석은 고르바초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산당 체제를 더 강화시켰고,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중국은 경제는 탄력을 줄 수 있도록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천명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통해 빈곤을 해소하고 단기간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충성도와 지지도 측면에서도 서방보다 강하다는 분석이다. 미중 경쟁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안보, GDP 등 표면적인 지표보다 미국과 중국의 내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소련이 붕괴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사회주의 시스템과 과학기술혁명의 불일치이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입각해 이야기하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불일치라고 할 수 있겠다. 1970년대까지는 통제 시스템이 당시 소련의 생산력에 적합했기 때문에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소련 경제가 무너졌다. 이에 반해 중국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에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생산관계를 조정해왔다. 지금은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에서의 새로운 생산력이 중국에 유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기존의 중국식 사회주의 시스템이 어디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다자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이 동북아의 갈등구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남북 관계가 화약고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6자 회담이 북핵 문제로 시적이 됐지만, 사실 더 포괄적인 주제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국이 주도 해서 미중 갈등 속에서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유럽통합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장 모네(Jean Monnet)가 없었으면, 세계전쟁은 한반도가 아닌 유럽에서 발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장 모네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제안하면서 평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반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유럽은 세계 전쟁의 발발을 피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세계 전쟁을 남북 간의 전쟁이라고 보지만 장 모네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내전이라고 표현했다. 내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소련 등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참가했다. 한국은 역사적인 당위가 있고 하나의 정당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이 주도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향후 동북아 협력 워킹그룹에서 지역 협력체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Comment 3

미중 패권 경쟁, 지속 가능성,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이스트-웨스트의 체제 갈등이라는 여시재의 미래지향적인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차별화된 외교정책을 보여줄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응은 더 강화되고, 더 체계화되고 있다. 현재 미중 갈등이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와 중국 전체주의 간의 하나의 체제 경쟁처럼 보이는데, 강대국 간 진영 싸움 속에서 한국의 생존전략과 중견국 연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안보, 경제, 외교 등 각 분야에서의 다중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유럽의 27개 국가는 EU라는 유니언이 있고,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NAFTA라는 경제 협력 기구를 통해 친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동북아도 지역 협력체 구상이 필요하다. 연해주의 볼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와 프리모르스키와 동북 3성, 몽골, 한국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이 경제 공동체로 작동된다면 세계적인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속에서 교통, 교통망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동북아 교통망 구축은 각국의 경제적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단 문제 혹은 냉전구조 속에서도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와 유럽경제공동체(ECC)를 설립했고, 현재의 EU로까지 이어져왔다. 동북아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동북아 철도 공동체 구현을 통해 역내 경제발전과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경의선 고속철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어떤 방식으로 교통망 연결을 이루어내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이 필요하다.

### Comment 4

경쟁과 다툼은 결국 하나의 탈출구가 필요한데, 그 탈출구가 우주자원 개발, 핵융합 에너지 개발 등과 같은 범 지구적 도전과제에서의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동북아 지역에서 환경과 에너지 협력은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도 결과물은 없다. 동북아의 환경-에너지 협력의 대상을 변화시키고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 동북아 환경-에너지 협력이 실현되려면 협력의 대상을 기존의 화석 에너지에서 그린 수소(재생에너지에서 얻은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만드는 수소)로 변경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탄소중립 위원회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 이에 북방과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북방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수력자원, 태양에너지 등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치적 판단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가스 생산국 러시아와 소비국인 유럽 각국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다. 러시아에 파이프라인이 건설돼서 유럽 각국을 연결하게 된 시점은 철의 장막, 냉전시대였다. 그 당시 미국이 반대를 많이 했지만, 유럽과 러시아가 정치적으로는 단절돼 있으나 경제적 실리를 함께 추구하겠다는 명목하에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했다. 러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부족한 기술력과 자본력 얻을 수 있었고, 또 서방 국가 입장에서

기술력과 자본력을 이용해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정치적 의지에 의해서가 아닌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탄소 다배출 제품 수입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부과하기로 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러시아-중국 등은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자국의 무역, 경제에 마칠 악영향을 대비해 석탄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태양광 패널의 핵심 재료인 폴리실리콘의 최대 생산지가 중국 신장이기 때문이다. 폴리실리콘 수입을 막는다면, 각국의 재생 에너지 추진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풍력도 우세하다. 글로벌 시장에 공급된 풍력 발전 설비도 중국산이 대다수이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과도한 제재를 한다면 자체적으로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 Comment 5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은 먼저, 지금까지 GDP와 군사비 지출 문제를 통계상으로 분석했는데 사실상 통계에 허수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군사비라도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효용가치는 차이가 많고 또 본다. 러시아는 요격미사일 \$400을 1대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미국의 동일 기종인 패트리엇의 6분의 1밖에 안된다. 그래서 현재 인도, 터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및 중동에서 러시아의 \$400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즉, 명목상의 군사비로 평가하는 것은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인건비 및 기본 설비 비용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갈등관계를 전 국제사회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이고, 오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미 패권의 지역 구도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심지어는 북극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마러 제네바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북극 군사 활동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하게 이의 제기를 했었다. 이렇듯 현재 군사를 비롯한 여타 모든 분야의 관계가 어느 한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지구, 심지어는 우주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동아시아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오판의 여지가 있다.

셋째, G2의 평가 기준을 경제적 발류에 초점을 맞추고, 무역·기술 부문 갈등, 정치·규범 경쟁, 에너지 갈등, 군사 안보로 단계적으로 보는 관점은 아날로그식 평가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가 간 갈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융·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러시아라는 변수이다. 예를 들어 미중 간 이해충돌 요인과 미래 간 이해충돌 요인은 각각 다르다. 경제 부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갈등을 한다. 왜냐하면 같은 '달러존'이기 때문이다. 반면, 러시아는 이러한 갈등관계에서 떨어져 있다. 러시아가 작년 2020년 후반기, 달러로 국제결제할 한 비중은 50% 정도이다. 러시아는 말 달러화를 10년, 20년 전부터 진행해왔다. 이와 같은 부분은 어떻게 통계를 추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러시아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궁극적으로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고 중국은 거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군사적인 갈등은 중국보다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차적으로 유럽에서 시작된 갈등관계는 현재 중동을 거쳐서 아시아, 심지어 북태평양 쪽으로까지 올라가고 있는 형상이다. 가장 가까운 예로 러시아가 2018년에 '보스토크(동방) 2018'이라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주도했다. 이 군사훈련에는 30만 명 가량의 병력과 1천대 이상의 군용항공기, 80척 이상의 군함 등이 투입되었다. 냉전시대 1981년에 실시된 '자파드 81' 훈련 이후 최대 규모다. 중국도 보스토크 2018에 참가했는데, 병력 3,200명, 각종 무기장비 1,000여대, 전투기와 헬기 등을 투입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인 보스토크 2018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동아시아에만 집중을 하고 동북 지역, 특히 북극 시대에 대비한 태평양 배령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공동체 문제에 대한 대안은 북중러 접경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이다. 북중러 접경지대에 대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원인 중에 하나가 러시아 변수이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은 1991년에 출범했는데, 당시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었다. 중국과 남북이 몽골까지 포함해서 출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탄력을 받지 못했던 건 두만강 하구 지역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져왔는데, 푸틴 3기 정부가 시작되면서 러시아가 개발 전략이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는 나진-하산 지역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20년 GTI 자문 회의에서 러시아 측은 서울선언에 하산 관광개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하산 지역 일대는 군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산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 러시아의 정책과 비교할 때 놀라운 발전이다. 북중러 접경지대 개발은 한국, 중국, 북한,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일치되고 또 GTI의 일환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서방 국가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북중러 접경지대 개발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정책적인 아이디어 도출이 필요하다.

#### Comment 6

본 발제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본 발제는 미중관계를 미국적 시각에서 분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우리는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뜻이 없으며 미국과 평화와 공동 발전을 이루며 살길 바란다"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미국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중관계를 연구하는 국내 많은 학자들이 미국 자료를 참고하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시나리오로 프로젝션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적 시각에 입각하여 분석하다 보면, 미국이 만들어놓은 시나리오에 우리 스스로도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노심상어 든다.

또한, 본 발제는 미중 시나리오를 10년 단위로 2030년, 2040년, 2050년 프로젝션 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 첫째, 앞으로 30년간 미국이 계속 중국을 적대시 하고 갈등의 대상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전제이다. 둘째, 중국은 계속 공산당이 장기집권하고, 지속적으로 미국 패권에 도전하며 미국을 대체하고자 한다는 전제이다. 본 발제는 이 두가지 전제하에 미중 시나리오를 프로젝션 한 것인가.

두 번째, 한국의 대응 시나리오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특별히 동북아 협력에 있어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분석에는 동의한다. 한국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일본 카드이다. 일본을 활용하면 대중 외교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중견국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의 의문이 든다. 역대 우리 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력 질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구상을 추진해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견국 협력 네트워크는 미중 갈등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것인데, 미중 경쟁의 격화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일본, 호주, 인도와 중견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 번째, 미중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중국 내부 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이 아시아 문화권인가. 현재 중국 외교는 전통 중국 외교와는 다른 사회주의 외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를 이야기할 때 중국을 떠올리지만, 현재 중국은 아시아적 가치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소위 말하는 아시아적 가치는 가족 간의 화생, 친구들 간의 프렌드십 또는 의리 등 유교 전통에 바탕을 둔 개념이다. 중국이 지난 70년 동안의 가장 큰 패배 중에 하나가 일당독재하면서 경제 발전은 성공했지만, 전통적인 아시아적 가치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 내부를 분석함에 있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2050년에 미중 간의 군사력 충돌이라는 프로잭션은 다소 낙관적인 예측이라고 생각한다. 토털 밀리터리 파워 측면에서의 분석은 미국이 월등히 앞서지만, 현재 중국은 오로지 대만과 남중국해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즉,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 70~80%를 이 지역에 두입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군사력의 70~80%를 한 지역에 두입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미국은 자국 군사력 20%~30%로 중국과 군사적 충돌을 감행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감지역에서는 사실 미중 간 군사력이 대등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퀄리티 측면에서는 분명히 앞서지만 중국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해군 합정을 투입한다면 승산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2027년은 중국공산당 당 근대 창설 100주년 해이다. 현재 중화권 언론에서는 100주년 때 대만과 통일을 하자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2050년 이전이라도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면 지엽적 군사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Answer 2

본 발제는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백그라운드 분석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중 관계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고, 아직까지 한국의 대응 시나리오는 없다. 한국의 대응 시나리오는 지금부터 해결해야 하는 연구 과제이다.

참언하자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G1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G1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G2의 개념은 2005년도에 로버트 줄릭이 "중국이 G2가 되려면 responsible stakeholder 가 돼야 한다."라는 주장에서 파생되었다. 사실상 미국은 중국이 responsible stakeholder 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이미 판정 내렸고,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한 불신이 정점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상호 불신이 작용하고 미중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G2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심지어는 G0임에도 불구하고 신냉전으로 가는 것조차 어렵다는 예측도 있다. 신냉전은 과거에 미국과 소련의 경우처럼 미중이 보편성을 갖는 모델이 되고, 그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 속에서 국가들을 규합시켜 상대방 진영과 대립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지금의 미중은 미래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G0의 흐름으로 각자도생의 세계가 도래하고 일종의 대국 간의 무정부상태, 아나키(anarchy) 상황이 오는 경우에는 20년의 위기와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럽의 기능주의 협력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능적 협력, 프런티어 협력(Frontiers of Cooperation)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미중 갈등이 정체성 갈등으로 심화될 경우 기능적 협력은 어려워진다. 미중의 정체성 갈등, 이념 체제 갈등을 넘어서는 동아시아의 화해의 프로세스가 논의되어야 한다.

#### Comment 7

동북아에서 중앙정부 간의 갈등은 계속되어 왔고, 중앙정부 간 갈등을 뛰어넘어 협력을 하자는 취지에서 1996년에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개국 광역지방정부들이 모여서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 연합(NEAR)을 창립했다. 현재는 몽골, 북한도 일부 광역자치체가 참가해서 총 79개 회원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 향후 동북아 협력에 작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과거 한국과 중국간의 사드 갈등(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개최한 국제회의에 중국 지방정부들이 참가했다. 또한, 경상북도와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문제로 서로 자매결연을 취소했으나, 현재 NEAR라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 간의 정치 이념적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 나간다면, 동북아협력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나가는 말

G2 구조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한국이 대안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미중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분야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톱다운(Top-Down)방식과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적절하게 병행하여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거버넌스 리스크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균열 문제를 좁히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국적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반도의 미래와 동북아의 평화 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하영선·손열, 『미중경쟁 2050: 단계별 확대와 타협의 모색』, 2021

## 여시재

여시재(與時齋)는 통일 한국과 동북아의 미래 변화를 위한 정책개발,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5년 12월 조창길 한샘 명예회장이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입니다.

여시재는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세계의 변화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가 되고자 합니다.

여시재는 국내외 최고의 싱크탱크 및 분야별 전문가들과 지식을 나누고 교류하는 '플랫폼'이자, 구체적인 실천적인 정책 솔루션을 제안하는 '솔루션뱅크'를 지향합니다.



여시재